



자유 중 으뜸은 경제자유

현진권 편

CFE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목 차>

-서문-	자유 중 으뜸은 경제자유	현진권 ·2
1.	'경제자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박동운 ·4
2.	경제자유보다 뭘이 중헌디?	김인영 ·7
3.	넘치는 쌀과 경제자유	신중섭 ·11
4.	자유, 번영하는 사회의 근본 가치이며 경제자유가 그 핵심	최승노 ·15
5.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	김광동 ·18
6.	애덤스미스의 행복론을 통해 본 경제자유 의 중요성	김승욱 ·21



<서 문>

자유 중 으뜸은 경제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것이다.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할까? 아마 자유일 것이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자유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정체성이지만, 민주주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임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결정이 현명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정체성의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항상 현명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자유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자유를 세분화해서 설명한다. 언론 자유, 신체 자유, 정치 자유 등이다.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유인 '경제자유(economic freedom)'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라면, 마치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로 생각하고, 부자를 대변하는 사치스러운 자유로 생각한다. 그래서 경제자유를 주장하는 분들은 항상 재벌의 앞잡이라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른 어떤 자유보다 우선한다. 정치적 자유도 경제자유 없이는 무엇이든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정치적 자유는 경제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경제자유도 추상적인 개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개인의 경제행위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자유는 '재산권 보호'다. 개인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자유는 그 의미를 잃고 만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 신체적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현대 민주주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미국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다. 미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상징적 슬로건으로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현대의 제도로 볼 때, 의회의 존재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의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즉 국민들의 경제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를 구축한 것이다.

경제자유는 자유의 핵심이다. 이제 자유를 얘기하면서 경제자유를 강조해야 한다. 우선 경제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부자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가 필요하며, 경제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경제자유는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유주의자인 여섯 분으로부터 글을 모았다. 각자 조금씩 학문적 배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시각에서 경제자유에 대한 설명을 한데 모았다. 한 가지 관점에서 쓴 글이 아니기에 조금 산만한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다양한 관점이 경제자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간단한 에세이 형식으로 모았지만,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읽을거리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버티홀에서 현진권-

‘경제자유’는 우리를 잘 살게 한다

박 동 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유주의 발전으로 자본주의 뿌리 내려

인류의 사상 가운데 개인의 자유에 핵심 가치를 두고 발전해 온 사상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자본주의 발달에 힘입어 중세적 사회 특성을 근대적인 것으로 변혁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 확대에 기여했다. 그 후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은 개인의 자유 보장에 필요한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은 자유주의의 실천적 측면인 자본주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 확대에 날개를 달았다. 이후 자유주의는 경제력과 정치력을 분산시켜 세계 곳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대의정치와 의회제도 발달을 가져왔다. 한 때 사회주의의 위협이 있었기는 하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는 현재 경제체제로서 뿌리를 굳게 내린 상태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개인의 자유 확대는 인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종교계, 언론계, 학문계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개인의 자유 확대로 우리는 잘살게 되었다.

자유주의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는 경제자유(economic freedom)를 누리고 있다. 경제자유란 밀튼 프리드먼에 따르면, '우리가 소득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소유 자원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된다.(Free to Choose, p.65-7)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경제자유가 사회주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프리드먼에 따르면, 정치자유(political freedom)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를 당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로 정의되는데(Capitalism and Freedom, p.45), 자유주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잘살게 됨으로써 경제자유

는 정치자유 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경제자유 확대는 경제력 분산과 정치력 분산을 가져와 정치자유 확대에 기여했다. 이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가난한 사람도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보통 사람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삶은 귀족주의, 전체주의에서 확실히 벗어나 있다. 이는 자유주의 발전이 가져온 경제자유 의 값진 기여다.

김종인 대표, '경제민주화란 재벌 규제'

'경제자유'는 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자유' 시각에서 보자.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급한 용어다. 이 용어는 현재 미국, 영국 등은 물론 독일에서조차 사용되지 않는다. 김종인 대표는 2012년 11월에 출간된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경제민주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경제민주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대경제 세력(주: 김 대표는 '재벌'을 이렇게 부름)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책 59쪽) 김 대표는 지난 6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며 대기업 견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재벌총수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는 18대 대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 결과가 우려된다.

삼성을 개혁하면 경제가 활성화될까?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내 18~34세를 포함한 주력층들을 대상으로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실시한 기업평판조사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개 항목을 놓고 일반 대중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는지를 측정해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7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다. 만일 삼성이 법을 위반했다면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삼성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 당연히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도 김종인 대표의 논리대로, 정부가 대기업 지배를 막겠다며 '경제민주화법'을 도입하여 삼성을 개혁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삼성은 글로벌 경쟁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밀려나고 말 것이다. 아니면 삼성은 짐을 싸들고 해외로 나가고 말 것이다. 이를, 김종인 대표의 주장처럼 '경제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이 같은 입법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예를 하나만 든다.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재래시장 보호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 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축소하여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법이 도입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설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그 결과는 '경제활성화' 아닌 '경제위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법은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경제적 자유보다 뭘이 중헌디?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신체를 구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때문에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 1215년)는 “자유인은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감금할 수 없다”고 왕의 자의(恣意)에 의한 신체의 구금을 금지하였다. 마그나 카르타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일반 평의회(현재는 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였다. 세금 부과를 의회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바꾼 것으로 국왕이 마음대로 자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마그나 카르타가 소수 귀족의 권리만을 규정한 것이며, 왕이 서명을 했어도 수시로 약속을 어겼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그나 카르타를 시작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족의) 권리’가 점차 시민들에게로 확대되었고,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s, 1628년)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1689년)을 거치면서 귀족과 시민의 권리가 확고하게 되었음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보를 위해 의회가 만들어졌고, 결국 국왕의 권력은 의회가 가지게 되었다. 청교도 혁명(the Puritan Revolution, 1640~1660)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의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이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명예혁명(the Glorious Revolution, 1688)으로 국왕의 권력은 의회로 이전 되었다.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은 시민혁명으로서 마그나 카르타에 연원을 두며, 이러한 시민의 자유를 위한 권리선언과 시민혁명은 미국 독립선언서(1776)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인(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경제성장을 결과했다. 다시 말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 축적의 자유가 가져온 것은 서구 경제의 폭발적 경제성장이었다.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 즉 재산축적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의 확보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와 인류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대한민국에는 과거 어떠한 자유의 투쟁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건국 이전 조선시대에 서양적 의미의 개인의 자유의 투쟁은 찾기 힘들다. 단지 조선말기 봉건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동학혁명(1894년)에서 시민혁명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만 고종과 민비(명성황후)의 요청에 따라 청군이 출동하고, 뒤이어 일본군도 출동하여 진압에 나섬에 따라 조선 왕조에 대한 백성의 개혁 요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갑오경장(1894) 이후 『독립신문』에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개인의 자유와 같은 개념이 소개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자리 잡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했지만 일제에 대항하는 논리를 민족주의(nation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들은 강한 저항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

때문에 서구 역사에서 수백 년의 기간을 두고 성취한 국왕으로부터의 자유 확보에 해당하는 ‘입헌적 자유국가’ 건설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 국가를 만든 것이었고,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1950년 ‘6·25 전쟁’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체제와의 전쟁이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 없는 압제와 전체주의를 내세운 북한 집단과 싸웠다. 6·25 전쟁은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 건국 헌법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을 인지하고 1952년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까운 헌법으로 수정했다.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이념과 사상에 근거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경제를 운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였고, 정당의 설립은 자유였고, 야당의 활동은 제약 받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 말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자유는 제약 받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했고,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받은 적산을 민영화하여 기업 활동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성공시켰다. 상당 부분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의 추진이지만 그 기반은 교역의 자유, 즉 경제활동의 자유의 확보를 통한 성공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의 계획과 점검만 담당하였고 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엄청난 수출을 이루어 낸 것이 경제개발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수출을 성공적으로 잘한 기업에 대하여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을 무한(無限) 경쟁시켰다.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는 국내기업들끼리 국제시장에서

는 국제적인 대기업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했다. 기업은 국내, 국제 모두 '경쟁'이라는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살아남고 맷집을 키웠다. 경제적 자유, 즉 교역의 자유와 교역으로 인한 이득을 기업 성장의 도구로 사용할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었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되었으며, 대기업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로인해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사실 박정희 행정부는 안보영역은 정권이 담당하지만 경제영역은 기업이 담당하되 그 성과만을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은 훗날 '민주화'로의 길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소위 '공순이·공돌이'가 중산층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 근대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도록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는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화'를 촉진했고, 공장 노동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어 중산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산층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실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통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는 민주 정부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중산층의 숫자가 1960년에는 매우 적었기에 4·19 학생의거는 성공할 수 없었고, 1980년에는 많아졌기에 전두환은 폭력으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집권하였던 것이며, 1987년에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했기에 군부정권은 퇴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87년의 '(민주화) 넥타이 혁명'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넥타이 맨 중산층이 더 이상 권위주의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7년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3,500달러 정도였다. 사무엘 헌팅턴(S. P. Huntington)이 주장한대로 민주주의의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득수준의 달성이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하는 일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권위주의'로의 회기를 막은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박정희 '산업화'의 성공 덕분이었다.

결국 경제적 자유에 의해 만들어진 산업화가 중산층을 만들어 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된 중산층은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 제도를 원했던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적 자유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키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곳에서 가능해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자유보다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

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데 평등이나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인권 역시 자유롭고 풍요로운 국가에서만 보장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자유’ 없이는 ‘정의’와 ‘평등’이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자유 없는 철장 속에 정의와 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왕이나 독재자로부터 자유는 중요하다. 그 가운데 경제적 자유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았다. 그렇다면 시쳇말로 “(경제적) 자유보다 뭘이 중헌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넘치는 쌀과 경제적 자유

신 중 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동네 슈퍼의 쌀값은 천차만별이다. 10kg 한 포대에 19,800원부터 47,600원까지 다양하다. 쌀이라고 모두 같은 쌀이 아니다. 싼 쌀은 최저 임금을 받아도 3시간 조금 더 일하면 살 수 있다. 수입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이다. 나는 쌀을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난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나에게 '쌀밥'은 낯선 것이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직후에도 쌀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보리쌀이 섞인 쌀밥을 먹었는지 기억은 분명하지 않지만, 쌀을 보면 어머니가 큰 주걱으로 밥을 푸던 큰 밥솥이 생각난다. 당시만 해도 대가족이라 아침에는 큰 밥솥에 밥을 지었다. 원형의 무쇠 밥솥에는 중간에는 쌀밥과 보리밥의 경계가 분명했다. 쌀밥을 지을 정도로 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쌀을 솥에 먼저 넣고 나중에 쌀을 중간에 조금 넣으면 쌀밥과 보리밥이 한 솥에 공존한다.

어머니는 항상 큰 주걱으로 쌀밥과 보리밥을 적당히 섞어 밥을 남녀노소 순으로 밥그릇에 담는다. 밥 푸는 순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 순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뒤로 갈수록 쌀밥의 양은 줄고 보리밥의 양은 늘어난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거의 보리밥이다. 그렇다고 할아버지 밥에도 쌀이 반 이상 섞인 것은 아니다. 쌀이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루 3끼 가운데 이런 식사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옥수수 죽을 배급받아 먹었고 저녁은 국수나 수제비를 먹었다. 초등학교에 다녔던 1960년대 이야기다. 유독 우리 집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온 동네가 그러했다. 가난을 가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혼식이 강제되어 항상 담임선생님은 도시락 검사를 했다. 혼식이 국정 목표였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혼식이 장려되었지만 실제로는 쌀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쌀 막걸리도 금지했다. 공식적으로 쌀 막걸리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다.

나는 슈퍼에서 쌀값이 참 싸다고 느낀다. 만일 쌀의 수입이 자유롭다면 쌀값은 이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아직 수입쌀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쌀값이 유지되는 것이다. 동네에 이런 슈퍼 등장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슈퍼에서는 다양

한 무게의 쌀이 유통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네 재래시장의 쌀집에서 쌀을 샀다. 작은 종이 봉지에 쌀을 담아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고 오던 기억이 새롭다.

쌀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변했다. '정부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니 부모 세대의 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쌀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기아가 사회 문제였던 가난한 나라가 '정부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가 주류를 이룬 부강한 나라로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설명하려면 우리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경제 성장의 의미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문화를 융성하게 한다. 동양은 '정신' 서양은 '물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은 '정신'없이 성장할 수 없지만, 물질 없는 '정신'도 없다. 물질과 정신은 서로 밀고 당기며 공진화한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고 문화가 꽃을 피운다.

우리가 오늘처럼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자유가 우리 사회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60년대와 70년대 우리의 산업화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가 주도의 경제도 경제적 자유의 구성 요소들이 상당 부분 실행되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했다. 우리는 산업화가 추진되기 이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경제적 자유가 없어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고 살 수밖에 없었다. 가난과 궁핍이 안빈낙도로 미화되었지만, 보통사람들에게 가난이란 고통이고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란 무엇인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The Wall Street Journal and The Heritage Foundation)과 프레이즈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해마다 각국의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경제자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지출, 재정 건전성, 재산권 보호, 부패 정도,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법의 지배 등이다. 정부 부분의 비중이 낮을수록, 재산권이 잘 보호될수록, 물가가 안정될수록, 무역이 자유로울수록, 금융 규제·노동규제·기업규제 등이 낮을수록 경제 자유가 높다. 어느 나라나 경제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 증가를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나 기업 규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국내 자본의 해외 이동을 막고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 자유가 높아지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경제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달성은 개인의 몫이지만,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여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과 질병, 무지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경제적 자유가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의 확장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정부는 노동과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는 자유 자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헤리티지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경제자유도가 보여주고 있듯이 경제적 자유는 그것을 실행한 모든 나라에게 더 큰 번영을 보장한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가 건전하고, 개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환경이 깨끗하게 보존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인간 개발 지수가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으며, 가난은 사라졌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사상은 18세기 후기 아담 스미스의 정치 경제학에서 출발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민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그는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폭넓게 제약하는 행위를 정당화한 중상주의를 비판하였다. 16세기와 17세기를 지배한 경제사상인 중상주의는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고무하였다. 이런 시대정신에 맞서 아담 스미스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때 경제는 가장 잘 작동한다는 원리를 내세웠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장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서 찾았다. 선택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 시장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고, 노동자는 고용주를 선택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할 상품과 서비스를 결정한다. 시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자,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소비자들은 즐거움을 부의 획득 및 소비와 동일시한다.

아담 스미스는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경제 자체는 '시장의 힘'

에 의해 작동한다고 믿었다. 이 '시장의 힘'은 자연스럽게 경제적 번영과 복지를 가져온다. 이러한 '시장의 힘' 때문에 어느 생산자도 자신의 상품 가격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가격은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은 외부의 지도(guidance) 없이도 작동하는 자기-규제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자기-규제적 시장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상충하는 이익의 갈등 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조화에 대한 자유주의적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자유시장의 이념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경제적 교의가 되었다.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은 '무간섭(laissez-faire)의 이념'과 결합하였다. 이 이념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없다. 정부는 경제를 그대로 두어야 하며,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기이익의 추구가 궁극적으로 일반적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무간섭의 이념'은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 강한 도전을 받지 않았다. 20세기 말에 자유 시장에 대한 믿음은 신자유주의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글로벌 경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함께 소득과 부의 격차가 확대되자, 경제 자유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오늘날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가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상위 1%에게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경향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부가 그들에게 이전된 것도 아니고,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살게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이런 생각으로 이끈 것뿐이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찬반논의를 떠나,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영역에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택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 태어난 시대와 장소, 가정, 신체적 조건과 성품 등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나와 관련된 경제 행위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 번영하는 사회의 근본 가치이며 ‘경제자유’가 그 핵심

최 승 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자유는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가 확대되면서 인류는 급격한 번영을 누렸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는 경제성장을 누렸고 번성했다. 헌법을 통해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나라들은 장기간 문명을 주도했다.

불과 몇 백 년 전만 해도 자유는 만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17~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자유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자유를 가장 소중히 해야 할 가치로 삼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19세기 이후에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구체화되었다.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념 정의가 어렵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법치를 통해 사유 재산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지향한다.

한 나라가 번영하느냐 침체하느냐는 자유주의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났다. 자유주의 사상에 충실한 정치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며, 자유주의 사상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시장경제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자유와 경제자유를 포함하고, 시장경제는 경제자유를 구현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 자본주의는 정치자유와 경제자유, 즉 자유를 추구하는 통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정치자유는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서 언론·출판·집회 자유 등을 포함한다. 경제자유는 개인이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자유를 말한다.

정치자유에 비해 경제자유는 자유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경제자유가 안정되고 활발해지면 될수록 정치자유도 그만큼 안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그만큼 경제자유는 중요하다.

홍콩과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늘날 홍콩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부자 지역으로 손꼽히나, 인도는 가난한 국가의 대명사가 되었다. 무엇이 두 지역의 운명을 가른 것일까? 홍콩은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을 때부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었다. 독립을 이룬 뒤에도 경제자유가 보장되었고, 경제자유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인도는 정치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심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결국, 경제자유가 활발했던 홍콩이 정치자유만 활발했던 인도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경제자유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는 정치자유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경제자유와 정치자유가 처음부터 똑같이 발달하긴 어렵지만, 경제자유를 먼저 이룬 나라는 시장경제가 번성하여 풍요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이 넉넉한 삶을 살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외에도 싱가포르가 세계적 기준으로 봐도 경제자유 수준이 높다. 싱가포르는 정치자유가 높지 않았지만, 경제자유가 크게 높다 보니 홍콩처럼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동시에 사회적 안정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자유가 낮은 나라는 필리핀처럼 민주주의마저 불안해지기 쉽다. 필리핀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경제 성장이 더뎠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마저 불안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가 앞서면 정치자유도 뒤따른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고 말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경제자유가 선행하고 정치자유가 뒤를 따라야 두 자유가 함께 발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자유의 외침이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최근 이집트, 중동아시아 국가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반복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경제적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자유, 즉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허약한 기반위에서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자유가 높아지면서 다시 말해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중산층

이 폭 넓게 형성됐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의 결과로서 정치자유까지 흔들리지 않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 이익을 늘리는 경제적 교류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자유까지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이룬 아시아의 대표적 성공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부 정치적 비판세력이 경제자유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자본주의 비판에 치우치고 있어 문제다. 이러한 반시장정서는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줄이고 있다.

반시장적인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민주화법'이다. 경제민주화법은 경제자유도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우리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새롭게 성장을 이끌 투자와 새로운 기술, 고급 인력이 필요할 때다. 자본과 기술, 인력은 경제자유도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향을 갖는다. 경제자유도가 있는 곳으로 모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자유도의 증진인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낮은 나라들은 경제 성장에 실패함은 물론, 정치적 자유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린다. 반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성장과 풍요를 누린다. 이제 경제자유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할 때다. 정부는 국민의 경제자유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다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올바른 선택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

김 광 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산다.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저녁에는 무슨 드라마(Drama)를 볼 것인지를 선택한다. 새로 나온 영화중에 무슨 영화를 볼 것인지를 선택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무슨 음악을 들을 것인가를 선택한다. 책이나 잡지 구입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 여행할 곳을 선택하고, 선거 때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 혹은 지도자들을 선택하기도 한다. 드라마든, 식당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다양성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 싶은 영화와 스포츠를 선택하고, TV채널을 선택하며, 듣고 싶은 음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을 받기위해 경쟁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선택할 수 없이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특정 영화만을 봐야하고, 제공된 특정 음식과 특정 정당만 먹고 선택해야 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끔직한 것이다. 만약,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상품개발이라는 경쟁에 나서지 않고, 나의 선택을 받기위해 식당이나 경쟁정당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삶은 비참해질 것이다. 야구와 같은 스포츠나 드라마가 재미있게 된 것이나 좋은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는 이유는 선택받기 위한 경쟁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선택할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 굳이 선택받기 위해 잘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만드나, 저렇게 만드나 다들 일방적으로 보아야 하는 영화이거나 드라마라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더 좋고 편리한 자동차가 만들어 지지도 않을 것이고,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들도 나올 수 없다. 나와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때문에 기술개발도 하고, 신제품도 만들고, 제품개량에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의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더 좋은 옷과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고, 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사회는 번영하는 것이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그들을 경쟁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받기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시킨 것은 나와 우리다. 소비자가 기업으로 하여금 열심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보라고 경쟁시킨 것이다. 우리는 자유선택권을 가지고 영화 제작사들을 경쟁시킨 것이고, 음식점들을 경쟁시킨 것이다. 또 더 좋은 여행상품을 만들어 보라고 경쟁시킨 것이고, 더 멋진 디자인의 옷을 만들라고 경쟁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남을 선택하듯이, 당연히 나도 타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무한대의 선택할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들은 타인의 선택을 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당연히 정의롭지도 않다. 내가 남들을 경쟁시켜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하였듯이, 나도 남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남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호간에 서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듯, 남들도 나와 관련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남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남도 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남들 간의 경쟁 속에서 그 중,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려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경쟁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동이 넘쳐나는 것도 우리 현실이다. 자신만은 경쟁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태도와 인식이란 남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들이 선택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신은 선택할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과 관련해서는 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타인이 누리야할 선택의 자유와 삶의 풍요를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도 남들에 대해 선택하듯이, 마땅히 남들도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남들로부터 선택받기위해 내가 기꺼이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선택이 가능한 자유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남들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기술수준이 뛰어난 스마트폰이 소비자로부터 더 선택받고, 좋은 영화와 훌륭한 스포츠 팀이 팬이나 관객들로부터 더 많이 선택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와 같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방법을 찾고 노력한 사람이 더 높은 연봉과 존경을 받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다. 야구선수 강정호, 류현진이나 축구선수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그룹 빅뱅(Big Bang)과 EXO가 성공적인 것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선택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1만원을 내고 영화관이나 음식점을 선택해서 찾아가듯, 대다수로부터 광범위한 선택을 받게 되는 제품과 영화 혹은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상징인 것이다. 결국 잘사는 사람이란 타인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 타인의 선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타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만족시켜주는 사람, 즉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바로 자유사회인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선택받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에서는 인격 수준이 높다거나 남달리 공부를 잘해 학력이 높다는 것이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가졌거나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는 것도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지 남들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의미할 뿐이지 그런 자격만으로 남들이 선택받을 만한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 속에서 남들로부터 선택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보수를 받거나 성공한 위치에 가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못한 사람들이다. 시험 성적이 좋았다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혹은 과거시험 보듯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높은 보수를 받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신분이자 자격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자유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고, 더 많은 선택을 받은 사람과 기업이 잘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理致)이다. 자유사회의 성공이란 타인들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고, 타인들이 원하는 그 무엇을 더 많이, 더 잘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자유선택 이전 시대에는 어느 계급이나, 어떤 신분이나 혹은 누구 자식이냐 하는 것들이 삶을 결정지었다. 물론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당과 국가 혹은 지도자가 나의 자유선택을 봉쇄시키고 대신했다. 그러나 시장사회에서는 선택이 기준인 것이다. 더 성공하려면, 더 잘 살려면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남들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한 것도 자유사회이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게 만든 경제적 자유야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창조성과 거의 무한대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번영을 만드는 기반인 것이다.

애덤스미스의 ‘행복론’을 통해 본 ‘경제자유’의 중요성

김 승 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의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견해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은 애덤 스미스의 행복에 대한 견해에 잘 나타나있다. 흔히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 교수는 1974년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등 세계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한 결과, 빈국의 행복지수가 부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불리고 거의 상식처럼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의 연구에서는 부유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더 행복을 느낀다는 반대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누구 주장이 맞을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누구 편을 들었을까?

애덤 스미스는 행복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1) 즉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 조건 중에 ‘빛’이 나온다. 빛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채를 진 가계가 많은데, 모두 불행한가? 사업을 하면 빛을 안 질 수 없는데, 그럼 사업가는 다 불행한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행복의 조건 중의 하나인 빛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빛을 말한다. 빛이 재산의 절반에 안 미치는 정도라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집을 팔아서 빛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가의 경우에도 이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부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능력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시대에 빛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시대에는 빛을 지는 이유는 주

로 기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대에 빛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돈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애덤 스미스는 고대 스토아 현자들의 생각과 달랐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와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림 2-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스토아현인들은 부와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었으므로, 수평한 SCD 선으로 행복관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수평선이 의미하는 것은 가로축인 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세로축의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불행하듯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 생계가 해결 안 되면 불행하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준의 부 (B점) 보다 적을 경우에는 행복이 맨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애덤 스미스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부가 이 수준(B점)을 넘어서면, 행복은 부의 많고 적음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했다. 사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부자라고 해서 중산층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형제간에 재산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사업 문제로 골치를 썩는 사람들도 대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는 ABCD의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복과 경제적 자유

여기에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도출해보자. 소득수준이 B점 이하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 최저수준이라는 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일 것이다. 현대인들에게는 자녀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으며, 기본적인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자기 집은 소유하고 있고, 조그만 자가용이라도 가지고 있는 수준을 말할 것이다. 고대인의 경우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대인의 경우 아픈데 돈 때문에 병원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재산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국부를 늘리는 것이 아

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라는 긴 제목의 책을 쓴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의 행복곡선은 ABCE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덕분에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최소 생활 수준의 부에서 만족한다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겠다고 열심히 부를 축적하게 될 때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자신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최저수준(B점)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했다. 요즈음 표현방법으로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다.

<도덕감정론>에는 '어리석은 지주' 이야기가 나온다. “거만하고 냉혹한 지주가… 그의 동포형제들의 궁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수확물 전부를 자기 혼자 소비하겠다고 상상하는 것을 헛일이다… 그 잉여부분을 …농민들에게, 하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 없다… 부자는 단지 … 가장 값나가고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중에, 부지불각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2)

이 부분이 <도덕감정론>에서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야심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 덕분에 생산이 증가하지만, 그것을 부자가 자기 혼자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소작인이나, 하인이나 마부 등에게 그것이 흘러들어가서 무의식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 수준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활(B점 수준 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최소수준만 해소되면 진정한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가난한 자들의 행복수준은 사실 부자 지주의 행복 수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행복은 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스털린의 역설처럼 부와 행복이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왓슨 스쿨의 연구처럼 부와 행복이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도의 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부는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부는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행복은 크게 높아진다. 반면에 양극화가 되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갖는다고 해서, 그 부자들의 행복에 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자들을 부러워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배 아파할 필요도 없다.

애덤 스미스는 한 사회의 질서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대에 유럽 지성인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흠스처럼 강력한 정부가 불가피한가? 아니면 이성이나 감정 등 인간 내부의 어떤 성질 때문에 질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최대 논쟁거리였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도 바로 이 문제였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건물의 장식과 같아서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의의 법은 기둥과 같아서,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프랑스 파리에 머무르면서 파리에서는 야간에 살인사건이 거의 매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런던에서는 일 년에 살인 사건이 서너 건에 불과한데, 왜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백배에 가까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가? 애덤 스미스가 파리를 방문했던 시기는 프랑스에서 대혁명 일어나기 약 20여 년 전이었다. 절대왕정의 치하에서 자유도 없고, 지나치게 무거운 세금으로 신음해서 영국 런던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난 것이 프랑스 파리의 모습이였다. 당시 프랑스에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프랑스의 법은 영국의 법보다 더 엄했다. 결국 애덤 스미스는 사회 질서가 유지되려면 법 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의 어느 정도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가 주어져야 자발적으로 법을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귀국 후에 저술에 집중해서 마침내 <국부론>이 탄생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는 국부가 증대되어야 국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부증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한국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해야 인심도 쓸 수 있고, 여유도 생기고, 체면이나 자존심도 차릴 수 있다. 오늘날 중동의 테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도 그 나라들이 경제성장에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가 성장해 가난한 계층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극단적인 테러 등에서 관심을 돌리기 때문이다. 이미 200여 년 전에 애덤 스미스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런 지혜를 적어 놓았다. 애덤 스미스의 혜안에 다시 한 번 놀란다.

자유 중 으뜸은 경제자유

저 자 | 현진권 편

발행처 | 자유경제원

발행인 | 현진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우편번호:04165)

이메일 | webmaster@cfe.org

팩 스 | 02) 761 - 5058

© 자유경제원 2016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경제원에 있습니다.